

## 39년 만의 '개헌 열망' 명분 없는 국힘 반대에 '물거품'

쟁점 제외 '단계적 개헌'에도 합의 실패  
국힘 '필버' 예고에 본회의 재상정 불발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무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국 무위로

禹의장 "정략·역지 주장 국민의힘 유감"  
與 "국민 큰 지탄" vs 野 "독재 심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39년 된 헌법을 바꾸려는 국민들의 개헌 열망은 또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관련기사 2·4·5·6·7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개헌안 재상정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우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었다. 오는 6월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 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전남 본회의에서도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46주년 5·18 추모 열기 고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1주일여 앞둔 1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학생들이 안내 해설을 들으며 희생자 묘 앞에서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조영권기자

이에 따라 개헌안은 상정돼도 다시 투표 불성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3분의2(191명)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우 의장은 개헌안 좌초의 책임이 국민의 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여야 간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한, 사실상 내용의 반대가 전혀 없는 개헌안을 놓고도 국민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정략과 역지 주장을 끝

아들여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를 건어렸을 뿐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같이 건어

것"이라며 "만약 20-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헌안은 6월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권력구조'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을 제외하고, 계엄 요건 강화 등 합의가 가능한 내용부터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구상이었다.

이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우 의장과 함께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엄에 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 전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시대에 맞는 개헌을 국민의힘이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이 독재의 길이고 내란의 길"이라며 "역사는 독재를 하고자 하는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여전히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 14-15일 후보 등록...광주·전남 선거전 점화

### 6·3 지방선거 D-23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한다.

각 정당은 공천을 마무리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공약 발표 등을 통해 선거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야권 연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2·3·4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사무 일정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과 후보들은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선거공보 제출과 선거벽보 첩부는 22일까

21일부터 선거운동...29-30일 사전투표

민주, 민행매 선대위 출범식 세 결집

내일 당지도부 공천자대회 필승 결의

野3당 선대위 출범...표심잡기 총력전

광산을 보선도 치열...야권 연대 촉각

지 완료되며 선거인명부도 같은 날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실시되며,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각 정당들은 선거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캠프에서 '전남 광주대선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정태래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민 후보는 선대위 인선과 선거 전략을 공개하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2일 오후 4시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 공천자대회를 열고 광주·전남·전북지역 공천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이정현 전 국회의원,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안태욱 전 광주시당 위원장을 확정하는 등 후보 공천 작업을 끝내고 선대위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호

남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지역 순회 공천장 수여식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표밭 공략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광주 중대선거구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전에 집중하고 있다.

진보당과 정의당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지방의원 후보를 중심으로 공약 발표와 선거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데다, 야권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까지 가세하면서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의 선거 연대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기본소득당은 최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광주 중대선거구 지방의원 선거와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3당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충분히 열려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할만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보 성향 야권의 선거 연대가 현실화될 경우 중대선거구 지방의원 선거와 광산을 보궐선거 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통합특별시장 구상과 지역 현안 등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특히 중대선거구와 광산을 보궐선거의 경우 정당 간 연대 여부에 따라 표심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변은진기자

Today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준비위 출범	3면
제주항공 참사 497일... "신상 규명하라"	6면
광주 뺑뺑이·사회적 기업 '5월 나눔세일'	7면

###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주세요!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출퇴근시 카풀 활성화하기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